

현안과 과제

■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목 차

■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Executive Summary	i
1.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1
2.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2
3.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경제연구실 : 신유란연구위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추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슈를 'FOMC behind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키워드로 정리한다.

■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Financial strain : 달러화 강세의 신흥국 금융 압박)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가져올 것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달러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채무 상환에 부담이 커질 것이고, 특히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이 클 경우 그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취약 5개국(fragile 5)은 총부채 중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향후 달러화 강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verturning : 한-미 기준금리 역전) 미국의 견고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3차례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올연말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1.50%로 예상된다. 현재 1.25%인 한국의 기준금리의 연내 동결을 가정하면, 올연말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dilemma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 유인과 국내 저성장 고리 차단 및 가계부채 상황 부담 완화 등에 따르는 인하 유인 사이의 딜레마에 당분간 봉착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unter effect : 원화 강세 재현 여부) 원화 가치가 과거 2번의 인상기에 나타났던 강세를 재현할까에 대한 의문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999년 및 2004년 인상 당시 원화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 유지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이번 인상기의 달러화 가치는 과거 2차례와는 달리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시사점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선진국의 정치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와 국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정책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이 예상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유출 논란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양호한 외환건성을 유지하고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미세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회복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자국 경기의 급락 및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1.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추가로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최근 연준 멤버들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있는 후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3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었음
 - 현재 미국 경제는 견고한 고용 시장 여건과 함께 꾸준한 민간소비의 개선 등이 견인하면서 점차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음
 - 2017년 2월 22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FOMC)의 1월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은 "다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음
 - 엘런 연준의장은 3월 3일, "이달 예정된 FOMC에서 목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발언
 - Bloomberg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15일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은 3월 14일 현재 96%를 기록
- 2017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주요 이슈를 'FOMC behind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함

<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



자료 : Bloomberg.

<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키워드	내용
F inancial strain	달러화 강세로 인한 신흥국 금융 압박
O verturning	한-미 기준금리 역전
dile M ma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C ounter effect	원화 강세 재현 여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1) Financial strain (달러화 강세의 신흥국 금융 압박)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 중 달러화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
- 주요 신흥 13개국¹⁾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표시 부채가 증가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악화될 우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세계로 투자되었던 미달러화의 본국 회귀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미 달러화의 글로벌 공급 감소 및 가치 상승으로 연결됨
 - 미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 역시 증가하고 시중 금리도 오르면서 이자 부담까지 가중
 - 주요 신흥 13개국¹⁾은 전체 부채 중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축해왔으나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면서 2016년 3/4분기 현재 2,229.4억 달러를 기록
-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취약 5개국(fragile five)²⁾은 총부채 중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향후 달러화 강세에 특히 취약
 - 취약 5개국은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며 2013년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밝힌 이후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했음²⁾
 - 취약 5개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에 10%대를 보였으나, 2015년 하반기 들어 하락하면서 2016년 2/4분기 현재 1.1%를 기록

1)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주요 신흥 13개국에는 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터키, 한국, 헝가리 등이 포함됨.

2)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후 국제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이들 5개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특히 취약한 점을 들어 '취약 5개국(fragile five)'이라는 별명을 붙였음.

- 이들 5개국이 보유한 총부채 중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부채 비중은 2015년 하반기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로 높은 수준(2016년 2/4분기 현재 33.8%)
- 이들 5개국 가운데 터키는 총부채 중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부채가 2016년 2/4분기 현재 70.2%에 달해 향후 달러화 강세 및 자국 통화 가치 급락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

< 주요 신흥 13개국 달러화 표시 부채 규모 및 비중 >



< 취약 5개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 규모 및 비중 >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 주 1) 각 국가의 비금융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이 자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debt securities)을 집계한 것임.
- 2) 좌측 그림의 주요 신흥 13개국에는 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터키, 한국, 헝가리 등이 포함됨.
- 3) 우측 그림의 취약 5개국은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임.

2) Overturning (한-미 기준금리 역전)

-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올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꾸준한 경기 회복세 및 2016년부터 지속된 물가상승률 확대를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3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연중 개선세를 보였으며 연간 1.6% 성장률을 기록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6년 연중 상승률이 확대되었으며 2016년 4/4분기 현재 1.8%(전년동기대비)를 기록
-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4/4분기 현재 1.7%(전년 동기대비)를 기록한 근원소비지출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고용시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7년 2월 현재 자연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는 2016년말부터 월 15만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



<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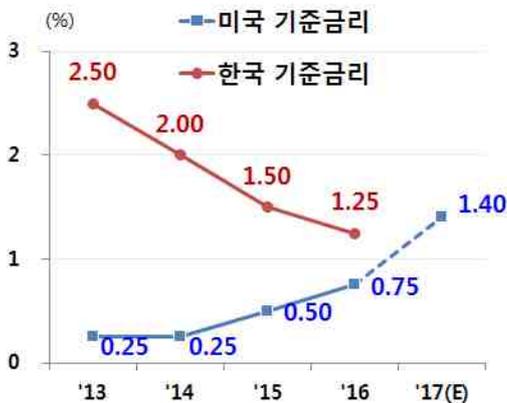
자료 : 미국 상무부(BEA), 미국 노동부(BLS).
 주 1)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대비 연율).
 2) 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자료 : 미국 노동부(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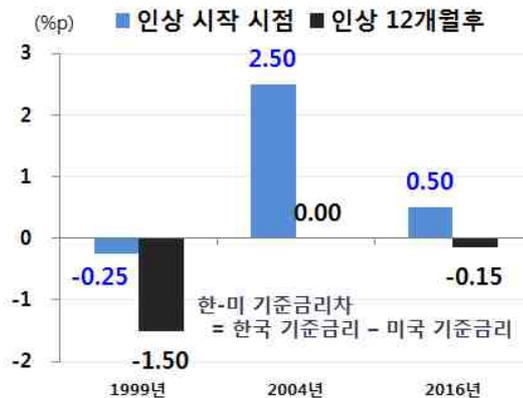
- 한국의 저성장 지속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 미국이 6차례 인상하는 동안(5.00% → 6.50%), 한국은 2000년 2월 한 차례 인상(4.75% → 5.00%)
-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12개월째 되던 2000년 6월의 한-미 기준금리차³⁾는 -1.50%p

-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 이 기간 중 초반 12개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8차례 인상되었으며(1.25% → 3.25%), 한국의 기준금리는 오히려 하락(3.75% → 3.25%)
-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12개월째 되던 2005년 6월의 한-미 기준금리는 동일
- 향후 2017년말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40% 수준까지 인상하고, 한국 은행이 현재 1.2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올연말 한-미 기준금리차는 -0.15%p 정도 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한국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연말 기준) >



< 한-미 기준금리차 >



자료 : 한국은행, 미국연준, 현대경제연구원.

- 1) 좌측 그림의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예상치는 2016년 12월 발표된 미국 FOMC의 '2017년말 기준금리 예측치(중양값)'임.
- 2) 우측 그림의 2016년 '인상 12개월후 한-미 기준금리차'는 좌측 그림의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예측치(1.40%)와 한국 기준금리의 연중 동결(1.25%)을 가정하여 계산.

3) dileMma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과 국내 저성장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을 타개하기 위한 인하 사이에서 당분간 딜레마에 봉착해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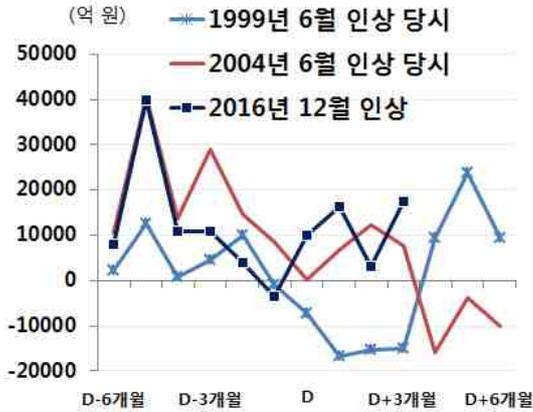
3) 한-미 기준금리차 = 한국 기준금리 - 미국 기준금리.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상승뿐만 아니라 증가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 등으로 제한됨
 - 1999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었던 외국인은 금리 인상 이후 3개월까지는 순매도. 이후 순매수로 전환
 -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당시, 인상 이후에도 약 3개월간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었던 외국인은 이후에는 순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순매도 기조는 대체로 유지되었음
 - 최근 외국인은 국내 주식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및 낮은 단기외채/총외채 비율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 2년여간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은행권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문에서는 여전히 대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 제약 및 가계부채 상환가중과 이에 따르는 소비 위축 등의 우려로 역시 부담됨
 -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3.3%)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2014년 이후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2.50% → 1.25%), 이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344조 원을 기록한 국내 가계부채는 2017년에 1,46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부담에 따르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년에 0.63%p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⁴⁾

4) 부채 증가는 유동성 완화로 인한 소비 증대의 플러스 효과와 채무상환 부담에 따르는 소비 제약의 마이너스 효과의 상반된 효과가 있음. 향후 소득 증가세가 정체되고 이미 너무 많이 증가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소비 제약의 마이너스 효과가 소비 증대의 플러스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됨(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1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6-46(통권 719호)).

< 과거 및 최근 외국인 투자금의 국내 주식 순매수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국내 경제성장을 및 가계부채 추이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7년의 가계신용 및 경제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

4) Counter effect (원화 강세 재현 여부)

- 과거 2차례 인상 당시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인상 시기에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화 가치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그러나 과거 2차례 인상 당시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고,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음(원/달러 환율 하락)
 - 1999~2000년 인상 당시 달러화 가치는 소폭의 상승, 엔화는 강세,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음. 이 당시 원/달러 환율은 인상 초기의 1,180원~1,205원대에서 인상 종료에는 1,109~1,115원대로 하락
 - 2004~2006년 인상 당시 달러화 가치는 보합, 엔화는 약세, 유로화는 보합세를 보였음. 이 당시 원/달러 환율은 인상 초기의 1,150원대에서 인상 종료에는 950원대로 하락

- 과거 2차례 인상 당시와는 다른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 기에는 원화 가치는 강세보다는 약세 전망
 - 유로존과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 및 보합세를 보였던 과거 2차례 인상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임
 - 유로존에서는 채권매입 규모를 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소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양적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로화는 약세 지속 예상
 - 일본 역시 더딘 물가 상승세 및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따르는 통화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는 약세 지속 예상
 - 올해는 특히 유럽에서 브렉시트 절차가 시작되고, 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강세 예상
 - 다만,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 및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의 요인으로 원화 약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원화 약세를 완만하게 이끌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 올해 초 환율조작국 이슈가 거론되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였음
 - 또한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현실화가 지연되거나 재정지출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 확대,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원화 약세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상존
 -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지만,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및 재정지출 확대 등 원화 약세 제한 요인과 상충하면서 올해 원화 환율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
 -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의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변동폭은 5.74원/달러, 전일대비변동률은 0.49%⁵⁾

- 이는 1999년 인상 당시(전일대비변동폭 : 3.06원/달러, 전일대비변동률 0.26%) 및 2004년 인상 당시(전일대비변동폭 : 3.23원/달러, 전일대비변동률 0.31%)에 비해 확대)

< 과거 및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의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Bloomberg.

< 국제IB의 2017년 주요 통화 환율 전망 >

	2/4분기	3/4분기	4/4분기
원/달러	1176.0	1198.8	1210.7
엔/달러	114.3	115.7	116.7
유로/달러	0.971	0.974	0.979
위안/달러	7.0	7.1	7.2

자료 : Bloomberg.

주 : 5~6개 주요 IB들의 2017년 3월 현재 환율 전망 평균치.

3. 시사점

-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선진국의 정치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와 국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

첫째, 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

- 대선 정국이 진행되면서 정책 집행 여력이 낮아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의 정책 조율 기능이 중요

5) 전일대비변동폭 = |금일증가 - 전일증가|, 전일대비변동률 = |금일증가 - 전일증가|/전일증가.
 6) 1999년 인상 당시 변동성은 19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일일 원/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계산.
 2004년 인상 당시 변동성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의 일일 원/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계산.

-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
 - 재정정책은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수준에서의 운용이 필요함
 - 기재부는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정책 기조를 밝힌 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됨
 - 추정편성은 국내 경제상황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진작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준금리 인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과도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경기 상황, 가계 부채의 증가세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하여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이 예상되면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 유출 논란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주요국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스왑도 체결 및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
 -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기 세력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큰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국내 전염을 방지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화 환율 급변동을 방지
 -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가 전망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강세 요인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셋째, 경기 회복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 국내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
 -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향후 금리 상승시 과도한 부담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지속 추진
 - 특히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
-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넷째,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경기 급락 및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진한 내수보다는 증가세인 수출이 국내 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국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 신흥국 금융 불안정성이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제 구축 및 협력 강화
 - 아시아 국가간 긴밀한 역내 무역 관계 대비 낮은 수준의 금융 통합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국에 위기 발생시 다국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자간 아시아 통화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
- 수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초 핵심 소재·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하고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확대
 - 원천 기술 확보, R&D 투자 확대 및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 지속 **HRI**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신유란 연구위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